

#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강력 추진”

##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

“선도 국가로의 도약  
위한 국가발전 전략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으로 전환  
일자리 창출로 새 기회”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한국판 뉴딜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위크숍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 방향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개념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성 제시를 통해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한 의미를 따로 설명하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 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을 통해서도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업을 위한 것”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훈련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월에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 정부의 임기까지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혁신 성장 전략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심 투자처와 혁신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혁신도 가속화 할 것”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전북도민, 이겨내자 코로나19’

송성환 도의장, ‘희망 캠페인 릴레이’ 참여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관계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응원 문구를 손글씨로 적어 SNS에 게시하고 다른 참여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는 손 글씨 응원 문구를 촬영, 페이스북에 게재해 국민과 의료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송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그리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김태경 회장 추천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송 의장은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전북도민, 이겨내자 코로나19!’ 라

송성환 의장은 희망 캠페인 릴레이 다음 참여자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을 각각 지목했다. /유호상 기자

## 21대 국회 1호 법안 ‘사회적 가치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민주 박광온 의원 발의

21대 국회의 1호 법안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 가치법)’이 차지했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했다. 사회적 가치법은 ‘의안번호 2100001’로 1호 법안으로 등록됐다.

사회적 가치법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규정하고 이 같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공공기관 운영의 핵심원리로 삼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지난

2017년에도 박 의원이 재발의했지만 또 다시 폐기됐다.

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보좌진은 “21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본청 의안접수센터에서 4박5일을 대기했다.

역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했다. 20대 국회에선 박정 민주당 의원이 ‘통일경제과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등록했다. /뉴시스

## 김태년 “2일 임시국회 소집요구 제출... 지체할 수 없어”

“과거의 일하지 않는 국회 재현 용납하지 않을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21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함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을 지켜서 국회의 문을 여는 데 지체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회법상 규정된 원구성 시한을 반드시 준수하겠다고 거듭 못박은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21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뽑는 첫 본회의는 오는 5일, 상임위원회 구성은 8일이 각각 법정시한이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개시됐음에도 또다시 과거의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미래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우며 국회 개원에 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가 제대로 일할때 행정부 견제도 이뤄진다”며 “과거의 낡은 관습과 관행으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된다. 여야 견제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그러면서 “일하지 못하게 국회를 멈춰세우는 것은 견제가 아니다. 견제를 핑계 삼은 발목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이라며 “견제는 일하기 경쟁, 정책 경쟁, 대안 경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데 대해서는 “과거의 낡은 관행을 깨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바란다”며 “통합당이 진정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국회 개원에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 민주 신현영 의원 ‘질병관리청 승격’ 정부조직법 대표 발의

21대 국회 법안 접수 첫 날인 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의 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보건과 복지 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시스



의회 부안조의회